

南·北韓關係의 變化： 對決에서 和解·協力으로

全寅永*

目次	
I. 序論	
II. 南北韓間의 對決과 敵對的 競爭	
1. 安保重視와 軍備競爭의 지속	3. 소련과 東歐變革에 對한 南北反應
2. 體制 및 理念競爭	IV. 南北韓間의 和解·協力 摸索
3. 對決의 지향과 의심의 전환	1. 南北韓의 環境適應
III. 蘇聯·東歐의 變革과 冷戰時代의 종식	2. 南·北高位級 會談의 성사와 定例化
1. 고르바초프 登場과 페레스트로이카 推進	3. 南·北韓間의 合意書 採擇과 發效
2.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포기와 東歐變革	4. 韓半島 非核化宣言과 北韓의 核開發
	V. 結論

I. 序論

한반도의 분단결정은, 긴 세월동안 함께 살아 온 우리 한 민족의 意思와는 전혀 관계없이 미·소양국의 이익과 편의주의에 의하여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반도 분단의 모순을 가리켜서 헨더슨(Gregory Henderson) 교수는 “현세계에서 한반도의 분단처럼 그 나라의 여전들과 감정에 관계없이 분단된 나라를 발견할 수 없으며, 한반도처럼 실수와 기획미숙으로 인해 분단된 나라를 찾아 보기 힘들고, 한반도 분단만큼 미국정부의 책임이 막중한 곳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비판한바 있다. 그는 서기 668년에서 1945년까지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의 단일 정치, 언어,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해 온 한반도내의 한 민족이 자신들의 의사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분단된 비운과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당혹감을 표시했다(Henderson, 1974: 8).

* 서울대 국민윤리학

43). 또 다른 역사적 ‘아이러니’는 패전국인 일본이 분할통치 되는 대신에, 일본제국주의의 희생물이였으며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한민족의 생활터전인 한반도가 승전국인 연합국들에 의하여 분단되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의 비극적 분단은 이질적인 남·북한정부의 출현으로 이어지면서 고착되었고, 남·북한간의 **對決과 競爭**은 한국전쟁이라는 3년여에 걸친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였다.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양측에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로 남·북한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적대감과 불신감을 품게 되었다. 전쟁중 군인과 경찰관 및 민간인 사상자 총합계는 무려 6백만명 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¹⁾ 국토전체의 황폐화와 이산가족 등의 지속되는 고통까지 감안할 때, 한국전쟁은 한국역사상 우리 민족에게 규모로 보아 가장 크고 참혹한 피해를 입힌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휴전후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근 40년 동안, 남북한은 적대관계를 지속시켜 왔으며, 치열한 군비경쟁을 전개하여 왔고, 상호 비방 및 중상행위를 반복하여 왔다. 불행히도, 남·북한은 외세에 의한 분단의 비극을 스스로 극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단을 심화시키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왔다. 오스트리아가 전후에 분단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남·북한은 전쟁을 치루고 휴전후로도 줄곧 적대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갈퉁(Johan Galtung) 교수에 의하면, 전쟁이나 내전을 겪은지 40년이 지나면 충격을 받았던 세대가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여 재통일 과정을 추진하게 된다고 한다. 내전을 겪은 스페인과 패전으로 분단된 독일의 재통일 과정을 예로 지적한 데 이어서, 그는 한국의 경우에도 북한지도자를 포함한 세대교체를 위해서 40년이 필요하다는 ‘T+40’(trauma+40 Years) 이론을 제시했다(Galtung, 1988:13-14). 갈퉁 교수의 유럽경험에 입각한 재통일 이론은 최근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동·서독의 경우에서 정확하게 입증되었다.

남·북한도 1990년 9월의 제 1 차 남북 고위급회담을 시작으로 하여, 1992년 5월 초의 제 7 차회담에서는 ‘남북화해, 불가침 및 화해·협력에 관한 합

(1) 한국정보자료에 의하면, 남·북한의 인적 피해는 576만 8,500명으로 추정 집계되고 있으며, 통일조선신문은 인적 피해상황을, 북한 민간인 피해자 268만 명을 포함하여, 모두 635만 267명으로 추정했다.

『한국전쟁사』, 제 1권 : 요약통사(서울 : 전쟁기념 사업회, 1990), p. 480.

의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공동위원회들의 구성 단계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쌍방간의 이익 상충과 견해차로 인하여 쌍방간의 交流・協力이나 緊張緩和에 뚜렷한 진전을 이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남북 핵통제공동위원회'는 심각한 입장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여부가 판명되고 있지 않아, 남・북관계의 개선은 물론 남・북한과 주변 4강간의 관계개선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下에서, 남・북한의 조기 統一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북한측에서 내세우는 1995년까지의 낙관적(?) 통일론은 남・북한의 국내외 사정을 분석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남한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수년내 또는 금세기 내에 통일이 가능하다는 소위 '흡수통일론'도 근거가 박약하며, 한국의 통일준비가 너무 미흡하다는 분석과 경고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남・북한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한민족이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선 4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간의 '對決 및 競爭體制'를 '和解 및 協力體制'로 역전시키려는 意志와 인내 및 노력이 요구된다. 그 이유는 그동안 누적된 상호간의 불신감과 적대감이 관계개선 의지를 약화시키고, 인내심을 시험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은 꾸준히 대결과 불필요한 경쟁을 지양하고, 민족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화해하고 협력하면서 통일을 이루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야만 할 것이다.

비록 남・북한만이 냉전시대의 마지막 보루처럼 아직도 대결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들어 국제정세가 크게 변화하였고, 한반도를 둘러싼 4강간의 관계나 4강과 남・북한간의 관계도 크게 변모하였다. 냉전기간 세계를支配하여 왔던 舊秩序는 와해 되었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처한 남・북한은 지금 挑戰과 機會를 동시에 맞고 있다. 변화된 국제환경에 어떻게 또 얼마나 혁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및 통일을 달성하는 속도와 폭이 정해질 것이다. 南・北韓이 和解하고 協力하며 주변환경을 유리하게 이용할 능력과 의지를 발휘한다면, 統一의 길이 그리 멀지는 않으리라는 樂觀論을 펴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불신과 적대감을 감소시키면서 화해와 협력을 적극적으로摸索하고 推進하여야 할 중대한 歷史的 시점에 도달해 있다. 和解와 協力은 우리

民族 전체를 번영시킬 수 있는 길이고, 統一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반면에, 끊임없는 對決은 제한된 민족역량을 소모시켜 결국 남·북한 모두를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敗者로 만드는 불행한 길이 될 뿐이다. 탈냉전과 화해·협력의 시대를 맞은 남·북한은 모두 승자가 될 수 있는 화해·협력의 길을 닦고 넓혀나가야 하겠다. 우리가 東·西獨의 극적인 統一을 보면서 얻은 教訓이 있다면, 남·북한이 소모적인 對決을 지양하고 상호간의 交流·協力を 증진시켜 통일의 실질적인 기반을 넓히며, 統一後를 對備하여 자체의 實力を 배양하고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협조관계로 이끌면서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外勢의 주도와 민족역량의 부족으로 近半世紀의 分斷生活을 감수해 온 우리 민족은 이제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밝은 民族의 未來를 건설하기 위하여 매진하여야 한다. 동·서독에 비해볼 때 화해·협력의 시작이 20년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한은 주어진 기회와 여건을 활용하여 통일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화해와 협력 분위기의 조성 및 실천을 위한 前向의 思考와 意志를 새롭게 하면서, 不信의 벽을 넘어 民族共存 및 共榮의 길로 추호도 동요함이 없이 꾸준히 전진하여야 하겠다.

Ⅱ. 南·北韓間의 對決과 敵對的 競爭

1. 安保重視와 軍備競爭의 지속

南·北韓은 1948년의 政權樹立으로부터 최근까지 줄곧 對決과 敵對的 競爭關係를 維持하여 왔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어 3년 동안이나 지속된 民族相殘의 민족적 비극은 남·북한관계를 회복하기 힘든 적대관계로 변모시켜 버렸다. 休戰以後 남·북한은 숙명적인 분단과 전쟁으로 인하여 파생된 갈등들에 대처하고 그들을 관리 또는 해결하는 데 最優先의 순위를 부여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며 귀중한 재원을 끊임없이 投入해야 하는 ‘국가안보’ 국가(National Security State)가 되어 버렸다.⁽²⁾

남·북한의 경우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위협인지와 그로 인한 불안감때문에

(2) 냉전기간의 미국과 소련, 그리고 이스라엘 등도 같은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로 볼 수 있다.

安保에 큰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국방건설을 위해 경제건설과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희생시켜 왔다. 북한은 특히 방대한 군사력 유지와 主體經濟의 강조로 인하여 人民들의 생활이 크게 희생되어 왔다. 미국 국방성 92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은 GNP의 20~25%를 군사비로 지출함으로써 세계에서 GNP 대비로 가장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국가로 되어 있다. 그리고 兵力數에 있어서 북한은 중국의 320만명, 러시아 250만명, 미국의 187만명과 인도의 120만명 다음으로 많은 120만명의 병력을 보유하는 다섯번째 나라로 꼽힌다. 한국도 베트남의 75만명 다음으로 많은 근 70만의 병력을 보유하여 10위권 내에 속한다.⁽³⁾ 한국은 1985년부터 GNP의 5% 이하를 군사비로 지출해 왔다. 1989년도 한국의 방위비는 6조 2,246억원으로 예산의 32.4%(GNP對比 4.3%)를 차지했었으며, 1990년에는 6조 9,447억원으로서 총예산의 30.2%(GNP의 4.0%)를 점유했었다. 1991년에는 7조 7,670억원이 국방비로 지출되었고, 1992년엔 8조 7,380억원이 되었다. 1993년도에는 총 38조 500억원의 예산에서 25% 가량의 군사비를 지출할 것으로 보이나, 방위비 총액수는 전년보다 9.8% 증액된 9조 6,000억으로 계속 증가되고 있다.⁽⁴⁾

한·미양국은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북한 정규군의 65%가 휴전선 100km 이내에 증강된 중무기 및 장비들과 함께 전진배치 되어 있는 사실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⁵⁾ 이에 대하여, 북한은 원자무기를 포함한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된 한·미양국군이 북한을 끌임없이 위협하고 있으며, 팀·스피리트 훈련 등의 전쟁연습을 통해 한반도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한다고 맹렬히 비난한다. 북한은 팀·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하여 1983년 ‘준전시상태 돌입명령’을 하달한 이래, 1984, 1986, 1988, 1989년에 각각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내렸으며, 1985년과 1990년에는 ‘전투동원 준비태세 명령’을 하달한 바 있다. 작년에도 전군 및 민병조직에 전투동원태세 명령을 내리면서,

(3) 조선일보, 1992년 9월 13일, p.1과 국민일보, 1992년 9월 12일, p.2.

(4) 중앙일보, 1992년 8월 27일, p.1 및 조선일보 1992년 9월 17일, p.6.

(5) 美國防省의 ‘亞太戰略構造報告書’에 의하면, 북한은 현역 110만명과 예비병 500만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에 5,400문의 자주포와 3,000문의 견인포 및 2,400문의 로켓트포를 추가했고, 1,000대의 신형탱크를 포함한 3,500대의 탱크를 배치하고 있다. 한국일보, 1992년 7월 30일, p.4.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 시험 전쟁이다.”라고 비난하면서, 김일성의 이름으로 군의 전체대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만반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했었다.⁽⁶⁾ 인민군 창전 59주년을 기념하는 1991년 4월 24일 노동신문 논설은 제국주의자들이 武力으로 약한 나라를 짓밟으려 한다고 비난하면서, “당은 군사를 重視하고 무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⁷⁾

南·北韓은 상대방이 끊임없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거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적 화해와 협력 무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있다. 한국의 국방백서를 보면, “세계정세의 긍정적·영향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에는 정치적 현실의 不認定, 첨예한 군사적 대치,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과 적대감 尚存 등으로 상대방을 위협의 존재로 인식하게 되어 군비경쟁에 의한 군사력 확보노력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國防部, 1990:129). 상대방에 대한 이러한 불신과 경계심은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해당된다.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특히 적 이미지(Enemy Image)가 확립되면⁽⁸⁾, 이를 시정하는 것은 무척 어렵고, 정보나 신호를 잘못 판단하기 쉽다. 일단 적으로서의 이미지가 형성되면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나쁜 면이 강하게 인지되고 자기의 결함이나 나쁜 점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급하거나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는 타국의 행위를 자국과는 다른 준거(2중준거)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자기측에 유리하도록 생각하는 심리적 성향 때문인데, 화이트(R. White)는 이를 ‘자민족 중심주의’로서 설명한다(White, 1968:245). 남·북한은 지속된 갈등과 충돌로 인하여 상호간에 깊은 불신감과 적대감을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의 행위를 해롭고 위협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 특색을 지닌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와 안보의 중요성 인식은 남·북한간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반복시켜 왔고, 긴장완화를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위협지역의 하나라는 사실은 불행

(6) 內外通信(綜合版), 第43卷(1991. 1. 1~6. 30), p. 739.

(7) 同, p. 740.

(8) 적 이미지는 실상을 보는 대신 이미지를 보게끔 만든다. Kenneth E. Boulding,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 i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III, No. 2(June, 1959), p. 120.

한 일이다. 이미 전쟁의 비극을 겪은 한민족이 또 다른 한국전을 치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발생하도록 허용해서도 안된다. 한반도 내에는 그동안의 꾸준한 무력증강으로 인해서 자체 방위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과다한 병력과 무기들이 존재하고 있다. 북한의 4대 軍事路線과 한국군의 現代化計劃에 의한 전력증강은 한국전쟁 당시에 비해 무려 80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가진 전력수준으로 이끌었다. 만일 이 상태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1주일 이내에 24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1개월이 되면 500만명 이상의 사상자와 시설물의 90%가 파괴될 것임을 워 게임(War Game)의 결과가 보여 준다(國防部, 1990:127). 우리 민족이 과연 대결과 경쟁만을 일삼다가 이토록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말아야 하는지 그 대답은 자명하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향유하며 통일의 숙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불신을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구축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군비통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Confidence Building Measures)가 취해지게 되면 불신감과 적대감의 벽이 얇아지고 交流와 協力이 可能해 진다. 남·북한이 일단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 그 파급효과는 각 분야로 확대되거나 가지를 뻗어 나가기 마련이다. 불행히도 남·북한간에는 신뢰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交流·協力과 統一論議가 계속 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전쟁중 서로 적대국이었던 독일과 美·英·佛·蘇가 協力하고 日本과 美·英·中 등이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협력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같은 민족인 남·북한이 아직도 서로를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심히 괴롭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남·북한은 뒤늦게나마 不信의 벽을 넘어 긴장을 완화시키면서 交流와 協力의 폭을 넓혀가야만 한다. 서로를 정확히 알고 이해할 수 있다면, 불신과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이 그만큼 容易해질 것이며,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軍備統制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여 結實을 맺을 수 있으며 궁극적 목표인 統一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2. 體制 및 理念競爭

美國과 蘇聯의 한반도 分斷占領은 남·북에게 각각 이질적 體制와 理念을 소개하였다. 美軍政 당국은 남한지역에 미국식의 民主主義 政治體制와 자본

주의 생활방식을 이식시켰으며, 反面에 소련군 당국은 북한지역에 스탈린식 社會主義 體制와 맙스—레닌主義를 옮겨 왔다. 이질적 體制와 理念의 도입은 남·북한으로 하여금 이질화의 길을 걷도록 했으며, 상호간의 갈등을 심화·증폭시켜 나갔다.

북한은 맙스—레닌주의라는 共產主義 思想을 기반으로 창설된 국가로서, 이를 조선의 구체적 실정에 맞도록 金日成이 창시했다는 ‘主體思想’을 국가의 모든 政策 및 活動의 지침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政治理念은 自由民主主義를 기본이념으로 삼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야기시키며 異質化를 深化시킨다. 북한의 이데올로기 路線은 美·日 등과의 갈등을 야기시키며, 일본의 식민지 통치와 미국의 한국전 개입 및 미군의 한국 주둔 사실 때문에 美·日에 대한 적대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金日成은 만경대학명학원의 어린 학생들에게,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국가와 계급의 적이며, 너희들은 우리의 적들을 미워해야 한다”고 이데올로기와 감정에 호소하여 선동하기도 했다(Baik, 1970:393-394).

북한의 이데올로기는 세계관과 共產主義社會의 전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제시하며, 목표의 달성을 위한 국민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動員 등을 합리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대외관계에서 我와 敵을 區分시키고, 정책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 북한의 이념은 對決相對인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며, 한국으로부터 流入되는 정보나 신호 등을 왜곡시켜 버리기도 한다. 한국의 정치는 미국에 종속되었고 경제성장은 자본가 계급의 착취에 의한 것으로 사상누각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본산이라고 북한이 비난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몇몇 특권 층 사람들만이 잘 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며 失業과 가난에 허덕이는 곳이며 사회정의와 평등원칙이 결여된 비민주적이고 온갖 명폐와 차별이 있는 사회라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韓·美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評價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긴장완화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근본적 변화로 인하여 맑스—레닌주의는 크게 퇴색하여 매력을 잃게 되었으며, 중국도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있고, 베트남과

(9) “On Communist Education,” in *Selected Works of Kim Il Sung*, Vol. III (Pyongyang: Foreign Language Publishing House, 1971), p. 257.

쿠바마저도 개혁의 필요성을 認定하는 적응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맙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主體思想을 강조하고 그에 입각한 ‘우리식 社會主義’를 고수하겠다는 경직된立場을 거듭 表明하고 있다. 북한은 소련과 東歐國家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것을 가리켜 역사의 흐름이 달라진 것으로 보는 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 배신자들의 反動的 詭辯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일부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한 것은 역사발전의 기본 흐름에서 볼 때 부분적이며 一時의 現象일 뿐이라고 애써 강조한다. 북한의 설명에 의하면,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이 좌절하게 된 근본원인은 사회주의의 본질을 역사의 주체인 人民大衆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못한데, 즉 사회주의 건설에서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役割을 높이는 문제를 기본으로 파악하여 나가지 못한 때문이라는 것이다.⁽¹⁰⁾ 북한은 아직도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비해 비 할 바 없는 커다란 우월성을 지니며, 사회주의로의 길은 새롭게 개척해야 하는 前人未踏의 협준한 혁명의 길로서 전진도상에 난관과 시련 및 예상치 않았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노선 고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념면에서의 경직성은 脫理念時代의 정신과 맞지 않는다. 북한처럼 人民政權의 強化, 노동계급의 黨路線, 集團主義, 社會主義 經濟體制, 社會政治의 生命體의 中心 및 인민대중의 의사를 체현한 최고 뇌수로서의 首領 등을 강조하고 있는 국가를 현재 이 지구상에서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북한과 自由民主主義를 指向하는 남한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힘들 것이다.

金正日은 인민정권과 노동계급의 黨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면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多元主義가 許容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多元主義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自由와 政治에서의 多黨制, 소유에서의 多樣化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政治方式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社會이며 인민대중의 統一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할 수 없으며,

(10) 1992년 1월 3일 金正日이 당중앙위 간부들과 한 談話인 ‘社會主義建設의 歷史的 교훈과 우리 黨의 總路線’ 중에서, 역사적 교훈에 관한 부분임; 統一院, 1992. 2., pp. 2-3.

社會主義 사회에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個人主義와 自由主義가 조장되어 社會共同의 利益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조성하고, 사회주의 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人民政權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 책동의 길을 열어 준다.”고 경고 했다.⁽¹¹⁾

북한은 소련과 동구의 변혁에 충격을 받아 이렇듯 체제유지를 위한 社會主義理念의 강조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수세적 입장을 이념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려들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社會主義路線의 고수라는 북한의 입장 이면에는 政權維持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다. 개혁과 개방의 결과로서 소련과 동구의 집권 지도층들이 몰락하고 재판에 회부되는 현실을 목격한 북한지도층은 현노선의 유지 및 강화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북한지도층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겠지만, 급격한 개혁과 개방 및 자본주의 방식의 도입에 따르는 부작용과 혼란 및 그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부담을 우려하고 있는 듯하다. 즉, 북한은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당위성보다는 金日成을 정점으로 하는 현 집권층에 대한 도전 가능성 때문에 필요 이상의 경직된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일부의 김일성 주변 사람들이 개혁과 개방을 원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안전과 권력유지를 위해서 소극적이고 신중한 자세를 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의 社會主義體制 및 理念의 固守라는 경직된 입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 金日成 자신도 그의 카리스마적인 權威 때문에 여지껏 강조해 온 路線이나 政策을 과감히 변경하기가 힘들 것이며, 그가 허용하지 않는 한 그의 측근들이 자의로 노선과 정책을 크게 변경한다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북한의 사회적 현실을 살펴 볼 때, 人民들이 ‘밑으로 부터’의 요구와 주장을 통해 개혁·개방을 실현한다는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남한의 현실도 북한체제와의 조화나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록 한국의 민주화가 최근에 와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보이게 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다원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봉괴와 유신정권의 몰락 및 6.29선언 등을 체험하고 자본주의식 삶에

(11) 同, p. 10.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黨과 首領이 영도하고 집단주의를 강조하며 私有를 不許하는 북한식 사회주의에 강한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인 대다수는 統一을 염원하면서도 自由民主主義와 資本主義 經濟體制를 포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전 大陸研究所가 6.25동란 40주년을 맞아 행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분단보다는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낫다’고 대답한 사람은 2,300명 중 412명(17.9%)에 불과 했고, 나머지 1,877명(81.7%)이 반대했으며, 모르거나 무응답 경우는 겨우 11명(0.5%) 뿐이었다. “북한 사람과 만나서 남한체제의 우월성에 대해서 논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느냐”는 물음에 對해서, 매우 자신있다는 응답자가 23.5%였고 어느정도 자신있다고 답한 사람은 48%였으며, 반면에 별로 자신없다는 사람들은 24.5% 그리고 전혀 자신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단지 3.7%에 불과했다. 경제력에 있어서 남한이 훨씬 우세하다고 답한 사람들은 절반인 50.9%에 이르렀고, 다소 우세하다고 응답한 사람들까지 합치면 무려 97%에 이르러 남한 경제체제 선호도를 반영했다. 응답자들은 북한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일성·우상화(42%), 사회주의·공산주의(18%), 폐쇄사회·고립사회(14.2%), 6.25 및 호전성(11.4%)을 지적했고, 반면에 동포·동족(12.1%)과 주체·자주성(1.5%)을 먼저 연상한 사람들은 소수에 그쳤다(大陸研究所, 1990:40-56).

이렇듯 한국인들의 북한관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남한체제가 우월하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물론, 한국정부의 지속되어 온 정보차단 또는 왜곡과 반공교육의 효과 때문에 북한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점차 공개되고 남·북한간의 왕래가 잦아지면서,⁽¹²⁾ 남한사회의 우월성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감이 확산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12) 남·북한간의 人的交流는 1991년 6월 말 현재로 모두 합해 연인원 3,380여명에 이르렀다. 70년대 북한을 방문한 남쪽 사람은 280명이었고, 80년대에는 240명, 그리고 91년 6월까지 520명이 북한을 방문했다. 북한측에서는 70년대에 228명, 80년대 1,555명(수해물자 전달 포함), 그리고 81년 6월까지 559명이 남한을 방문했다. *한국일보*, 92년 7월 20일, p.3.

3. 對決의 지양과 의심의 전환

남·북한이 각각 자기측의 체제를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믿고 있으며 상대방체제나 이념을 혐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지난 40여년 동안 지속되어 온 對決과 적대적 경쟁관계 및 이념교육을 생각할 때 수긍이 가는 일이다. 남·북한은 생존을 위한 대결과 경쟁뿐 아니라, 경제 발전면에서도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 경쟁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서로 상대방보다 더 認定을 받고 보다 높은 입장에 서려는 地位競爭을 벌려 왔다.⁽¹³⁾ 추가로, 남·북한은 對決과 競爭過程에서 발생한 랭군사태와 같은 여러차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겪어야 했었다.⁽¹⁴⁾ 이러한 對決과 競爭 및 그로 인하여 파생된 문제들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은 큰 노력과 희생을 치뤄야 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불신과 적대감이 깊게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온 민족이 염원하는 統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신감과 적대감 및 이질화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시키고, 對話와 접촉을 통해 불신감과 긴장을 완화시켜 나가며, 가능한 분야부터라도 人的・物的 交流를 실시하고 확대시켜 나가야 하겠다. 통일만 하기로 작정한다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린다는 북한측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고 하겠지만, 그동안의 군비경쟁과 무력충돌, 상호간 비방・중상, 정통성 경쟁, 경제적 우세 및 국제적 지위를 위한 경쟁, 그리고 강도 높은 이념교육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누적된 현실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고려한다면,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해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다행히도 냉전시대가 종식되고 신국제질서가 형성되면서, 한반도에도 남·북고위급회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해와 불가침 및 交流・協力を 위한 합의서와 합의서 내용의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뒤늦게 나마 한반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남·북한 모두를 위해서 다행스럽고 축하할 일이다.

(13) 남·북한간의 정치체계 차이와 적대적 경쟁을 집중적으로 다룬 책의 하나는 길영환 교수의 저서이다. See Young Whan Kihl,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Westview Press, 1984).

(14) 한반도에서 발생한 주요 위기관리에 관해서는, 白種天, “韓半島의 危機管理：事例와 評價,” 李容弼, 全寅永, 白種天, 鄭泰東, 「危機管理論：理論과 事例」(서울 : 인간사랑, 1992), pp. 196-302 참조.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은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은 항상 불안감을 지닌채 살아와야 했다. 때로는 안보의식이 정권유지에 이용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발전에 크게逆行하는 사태도 발생하곤 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동안 한·미양국과의 대결 상태와 統一課業을 이용하여 1人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고 장기집권과 부자간 세습체제 구축에 성공하였다. 한편, 남한의 집권자들도 反共과 안보태세 확립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적 도전세력들을 탄압하여 왔었다. 이렇듯 남북한간의 대결과 경쟁은 북한에서의 독재정권 유지와 남한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가능케 하고 지속시키는 데 기여함으로써, 民主主義的 政治發展을 크게 저해했다.

이제, 和解와 協力의 새로운 시대를 맞은 남·북한은 지금까지의 對決狀態를 과감히 청산할 각오를 세롭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雙方의 新思考가 절실히 要求된다. 民族의 共存과 共榮을 위해서는, 不信의 늪에서 벗어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交流·協力を 증진시키며, 객관적 여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한 후에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다. 대결의 지속은 남·북한 모두에게 피해와 파멸만을 초래할 뿐이며, 화해와 협력은 民族全體의 保存과 번영을 약속할 것이다.

III. 蘇聯·東歐의 變革과 冷戰時代의 종식

지난 40여년 동안 남·북한은 대결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和解와 協力의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왔으나, 世界的 추세인 화해·협력시대의 도래가 한반도에서도 냉전을 종식하고 화해·협력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方向으로 나아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은 고무적인 사실이다. 남·북한도 급변한 世界氣流 속에서 흘로 역행 할 수는 없게 되었다.

1. 고르바초프 登場과 페레스트로이카

1985년 3월 12일 소련공산당의 書記長이 된 고르바초프(M. Gorbachev)는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와 글라스노스트(Glasnost)를 통해 침체된 소련 사회주의 체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시도하였다. 1986년 2월 25일의 소련공

산당 제27차 대회에서 행한 중앙위 정치보고에서, 고르바초프는 정치활동 및 정치적 활동의 결합, 경제·사회·도덕분야에서의 불리한 경향 및 그 이유들에 관하여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의 행위들이 오랜동안 시대의 요구에 뒤지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이 더욱 빠르게 생겨났다고 지적한 후, 구체적으로 관리형태와 방법상의 정체 및 경직, 사업에 있어서의 역동성 쇠퇴, 그리고 심화된 관료화 현상을 열거하면서 사회생활에서 정체화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현 상황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변화시키지 않고 개선되기를 바라는 특이한 심리가 중앙과 지방기관 모두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우선 순위의 과업으로서 가급적 빨리 사회·경제발전상에서 제기되는 부정적 요소들을 극복하고 이 과업을 가속화시킬 것을 강조하였다(Gorbachev, 1987:84).

고르바초프는 국제경제도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어 상이한 정치체제나 국가나 지역간에도, 새로운 접근과 方法 및 관계형태가 요구된다고 역설하면서,黨은 국내외의 근본적인 새로운 경세를 이해하고 있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책임을 인식하고 있고 요구되는 변화를 수행할 의지와 결의를 지니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내경제 및 사회발전이 세계무대에서의 소련의 전략을 결정한다고 말하고, 당의 주목표는 소련국민들이 지속적인 平和와 自由를 누리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이며 핵전쟁 준비를 종식시키는 것이 현상황에서 택할 우선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Gorbachev, 1987:157).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이 요구된다고 판단한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경제·사회발전을 저해해 온 요소들을 청산하여 활력을 되찾으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환경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평화로운 국제환경을 확보하려면 이질적 체제간이나 국가들간의 관계가 새로운 접근방법이나 형태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고르바초프는 깊이 인식했던 것이다. 이는 소련의 국내 문제가 대외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의 新思考는 對美關係와 對東歐關係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關係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면서 제네바 군축회의가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1987년 12월에는 미·소 간에 중거리 핵미사일(INF) 폐

기협정에 서명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미・소는 1990년의 몰타회담에서 협력 관계를 과시했으며, 양국은 1992년 6월 16일 오는 2천년까지 미・소가 보유하는 핵무기 합계를 6천 내지 7천기로 대폭 제한하기로 합의하는 큰 성과를 올렸다. 이는 미・소가 보유하는 핵무기의 3분의 2가량을 감축하는 과감한 결정으로서 세계평화를 위한 획기적 조치가 된다.

고르바초프는 또한 1986년 7월 28일의 울라디보스톡(Vladivostok) 연설에서 소련은 아시아・太平洋 국가의 일원임을 강조하면서, 소련은 지역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바탕위에서 접근하고 지역내의 모든 국가들과 상무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Gorbachev, 1987:248-249). 이는 소련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는 ‘신사고’에 의한 것임을 표명한 것이다.

2.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포기와 東歐變革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은 지역은 東歐였다. 소련의 ‘사회주의 국제주의’(Socialist Internationalism)는 동구국가들의 국익과 독자노선 선택을 계약해 왔었는데, 고르바초프는 主權制限論 또는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했다.

1987년 11월 2일 고르바초프는 10월 혁명 기념일을 맞아, “코민테른, 코민포름, 그리고 결속을 요구하는 국제회의 시대는 지났다. 그런고로, 동맹은 ‘존경에 의한 단합’의 기초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해 4월에 제 2 인자인 리가초프(Y. Ligachev)도 “모든 국가들은 자신의 길을 택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한 바 있었다(Dawisha, 1988:202). 이는 분명히 브레즈네프 독트린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후르시초프(N. Khrushchev)의 ‘사회주의로의 다양한 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아, 1986년 2월의 제27차 소련공산당 대회시에도 고르바초프는 대표들의 과민들에게 과감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었고, 모스크바市黨委員會 제 1 서기였던 엘친(B. Yeltsin)은 “왜 우리는 관료주의와 사회부정의 및 남용들을 여러해 동안 척결하지 못 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었다(Dawisha, 1988: 163).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은 헝가리와 폴란드로 하여금 독자적인 개혁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고 개혁권유에 저항하는 동독과 체코슬로바키아 및 루마니아의 보수지도층들과 갈등을 빚었다.

1988년 5월 20~22일 간 열렸던 헝가리공산당(HSWP)대회는 1956년 10월 25일부터 집권해 온 카다르(J. Kadar) 제 1서기를 그로스(K. Grósz)로 교체하고, 새로 선출된 당 중앙위원회는 카다르를 포함한 8명의 보수파 정치국원들을 탈락시키는 대신 네메스(M. Németh)와 포츠가이(I. Pozsgai)와 같은 6명의 개혁파 인물을 선출함으로써 보수세력의 급격한 쇠퇴를 초래했다(Staar, 1989:330-331). 1989년 초 헝가리 의회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합법화 했으며, 3월 중순에는 시위대들이 자유선거와 소련군 철수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5월 13일에는 공산당이 야당지도자들과 多黨制를 논의하였고, 6월 16일에는 30만명의 군중이 참여한 임레 나지(Imre Nagy) 前首相의 이장식을 거행하여 그의 명예를 회복시켰다. 10월 7일 헝가리 공산당은 당명을 헝가리 社會黨(HSZP)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당강령에서 자유선거를 통한 복수정당제 채택과 함께 당의 목표를 ‘민주적 사회주의의 실현’으로 정했다.⁽¹⁵⁾ 이러한 헝가리의 과감한 개혁과 변화는 다른 동구국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폴란드도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기꺼이 호응했다. 폴란드 정부의 대변인 울반(J. Urban)은 1987년 2월의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개혁은 폴란드의 독자적 실험에 새로운 기반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선언했다. 야루젤스키(W. Jaruzelski) 대통령은 사회주의의 사멸화를 방지하기 위한 개혁을 추구하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정력과 과감성 및 통찰력을 극구 찬양했다(Dawisha, 1988:179-180). 1987년 10월 야루젤스키는 소련의 개혁을 능가하는 경제·정치 개혁안을 공산당중앙위에 제시하였으나, 내핍생활과 물가인상을 포함한 개혁안은 자유노조지도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좌절되고 말았다. 그후 1988년 4월 말에 파업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강경책으로 응수하고 8월 22일에는 비상조치령을 공포하였으나, 정부는 불법단체로 간주했던 자유노조지도자인 바웬사(L. Watesa)와 협의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12월 21일 폴란드 공산당은 자유노조측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치국원 중에서 6명의 강경론자를 퇴진시키고, 자유노조와 대화를 시도했다. 1989년 2월 6일 시작된 양측의 협상은 4월 5일 마침내 3개의 중대한 협정체결을 성사시켰다: (1) 자유노조의合法化, (2) 언론 및 결사의 자유, 국가기관 선출을 위한 민주선거, 사법부 독립을 포함한 정치개혁, (3) 그리고 經濟의 自由化에 관한 것이었다

(15) 조선일보, 1989년 10월 10일, p. 3 및 한국일보, 1989년 10월 10일, p. 4.

(Banks, 1990:522).

이로써 폴란드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돌파구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다. 1989년 6월 4일과 18일에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자유노조는 의회(Sejm)의 460개 의석 중 미리 배정된 의석을 제외한 161석을 모조리 석권하고, 신설된 상원의석 100석 중 99석을 휩쓰는 압승을 거두었다. 노동자의黨인 폴란드 공산당이 자유노조에게 완敗했다는 것은 아이러니(Irony)였다. 선거 결과로 인해 폴란드에는 자유노조의 마조비에츠키(T. Mazowiecki)가 이끄는 4개 정파로 구성된 非共產黨內閣이 구성되는 이변이 발생했다.⁽¹⁶⁾ 즉, 폴란드에서 공산당 독점시대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12월 29일 폴란드 의회는 일련의 헌법 수정안을 통과시켜, ‘폴란드 인민공화국’을 ‘폴란드 공화국’으로 변경 키로 했으며,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지도적 역할’을 종식시키고 했고, 폴란드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한다는 요구조항을 삭제시켰다. 1990년 1월 29일에는 폴란드 공산당을 해체하고, 새로이 ‘폴란드 공화국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cy of Polish Republic)을 창선했다(Banks, 1990: 522). 이렇듯 폴란드는 1988~89년 기간에 근본적인 체제개편을 완료했고, 존재이유를 상실한 폴란드 공산당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해체되고 말았던 것이다.

헝가리와 폴란드의 과감하고 신속한 개혁과 체제전환 배경에는 고르바초프의 관용과 불간섭이 있었다. 라코프스키(M. Rakowski) 폴란드 공산당 정치국원은 1989년 10월 11일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헝가리와 폴란드 공산당의黨各과 강령들을 변경하여 신당으로 변신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고르바초프와 회담을 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소련 서기장이 “당의 형태와 조직은 전적으로 해당국가의 결정사항이다.”고 말했다고 전하였다.⁽¹⁷⁾

고르바초프의 개혁권유와 급진적 변화에 대한 허용은 동구의 보수적 지도자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었다. 전후의 동구국가들 정치엘리트 선정과 권력유지에 소련의 입김이 크게 작용해온 점을 생각할 때, 고르바초프의 등장이 유고와 알바니아를 제외한 동구국가들의 보수적 정치지도자들을 우려케 만들었음을 충분히 이해가 간다; 동구내 보수적 정치인들과 소련내 보수적 정치인들은 호혜적인 ‘연립정치’의 관행을 유지했었다(Jones, 1981:Ch. 1-2).

(16) 한국일보, 1989년 9월 9일, p. 4.

(17) 동아일보, 1989년 10월 12일, p. 4.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개혁을 위해서도 동구 국가들이 개혁 대열에 동참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독자노선을 추구하던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N. Cheausescu)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개인숭배 조장 등의 보수적인 국내정책을 바꾸려 들지 않았다(Dawisha, 1988:170). 개혁에 소극적인 체코지도층에 대해서 고르바초프는 “실책을 솔직히 인정하여야 사회주의를 강화할 수 있으며, 부분적인 수선으로는 불충분하고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권유했다(Dawisha, 1988:170). 고르바초프는 비교적 여유를 보였던 동독의 호네커(E. Honecker)에게 1989년 10월 7일 베를린 방문 기간 중 개혁의 지연에 따르는 불이익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는 새로운活力을 필요로하고, 체제내의 새로운 힘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네커는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잘되기를 바라나 동독에서는 그러한 개혁정책을 허용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¹⁸⁾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도 1989년 8월의 ‘뉴스위크’지와의 면담에서 “루마니아는 현재 사회주의 뿐이라”고 자신 있게 확인했었다.⁽¹⁹⁾ 이렇듯 고르바초프의 개혁권유는 동구의 보수적인 정치지도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호네커 등 보수적 동구 지도자들의 저항은 단명으로 끝났다. 헝가리가 1989년 5월 오스트리아와의 국경을 개방하자, 헝가리를 통해 서독으로 향하는 동독인들의 대탈출국이 야기되었고, 9월과 10월에 이르면서 호네커 정권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었다. 9월 말까지 24,500명의 동독인이 서독에 도착했고, 10월 말까지 추가로 24,000명이 넘어 왔으며, 방치될 경우 1989년 말까지 10만명이 동독을 벗어날 것으로 추산되었다.⁽²⁰⁾ 고르바초프의 10월 6~7일 간 베를린 방문을 전후하여 동베를린과 라이프치히 등지에서 개혁 및 자유총선 등을 외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소련과 국민들로부터의 2중 압력에 직면한 호네커는 퇴진 할 수 밖에 없었다.⁽²¹⁾ 1989년 10월 18일 동독 공산당(SED) 중앙위원회는 크렌츠(E. Krenz)를 새로운 서기장으로 선출했으며, 11월 9일에는 역사적인 베를린 장벽의 붕괴사태가 발생했

(18) *한국일보*, 1989년 10월 9일, p. 2.

(19) *Newsweek*, August 21, 1989, pp. 16-17.

(20) 김재경, “독일통일과 페레스트로이카,” *라종일* 외,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파장」(서울 : 예진, 1990), pp. 160-161; *Newsweek*, September 25, 1989, p. 17.

(21) 1989년 10월 16일 라이프치히에 시위에는 10만여명이 참여했고, 3일 후에는 30만명의 대규모 시위가 잇달았다. Banks, *op. cit.*, p. 232.

다. 12월 1일 의회는 동독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종식시켰으며, 5일후 당은 헌법수정 및 1990년 5월 6일(실제는 3월 18일)에 의회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1년도 못되는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은 독일의 통일위업을 달성하고 戰後의 얄타체제를 봉괴시켜 버렸다.

체코에서는 후사크(G. Husak)가 국내외 압력으로 인해 1987년 12월 중순에 보수성향의 개혁론자인 야케스(M. Jakes)에게 제1서기 직위를 양도했으나, 1988년 1월 수많은 '77헌장' (Charter 77) 회원들이 체포되고, 3월에는 수백명의 카톨릭 신자들이 연금되었으며, 8월에도 소련의 체코침공 20주년과 독립 70주년을 기념하다가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이 체포되었다(Banks, 1990:232). 이러한 상황때문에 체코 지도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1988년 4월과 10월에 당중앙 및 정부가 재구성되었다. 아다메츠(Adamec) 수상은 취임후에 1968년의 두브체크(Dubcek) 개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호네커의 경질은 좀 더 빨리 이루어져야 했으며 소련의 패레스트로이카를 유일한 희망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헝가리와 폴란드를 휩쓴 것과 같은 변혁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계를 밝혔다.⁽²²⁾

그러나, 체코 공산당의 운명도 예외는 못 되었다. '시민광장' (Civic Forum)이 결성된 직후인 1989년 11월 25만명이 가세한 반정부 시위가 프라하를 행진하면서 사태가 급진전 했다. 11월 22일 두브체크가 귀환하여 브라티슬로바 군중집회에서 연설하고, 24일에는 야케스가 당정치국과 서기국에서 사임하였다. 11월 28일, 50만명의 군중이 운집한 것으로 추산되는 3일간의 시위 끝에, 정부는 권력배분에 동의하였으며 12월 5일 공산당 정권의 독점적 지위 상실을 수락했다. 이어서, 12월 7일 아다메츠 수상이 사임하고 12월 10일에는 후사크 대통령도 사임했으며, 체코의회가 반체제 인사인 하벨(V. Havel)을 대통령으로 지명함으로써 41년간 지속되어 왔던 공산당 통치는 막을 내렸다(Banks, 1990:162).

루마니아만은 동구의 혁명에 휩쓸리지 않을 듯이 보였으나, 그도 잠시뿐이었다. 1989년 11월 20~24일 사이에 열렸던 루마니아공산당 대회시까지만 해도 루마니아는 주변의 혁명열기를 크게 느끼지 않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티모소아라(Timisoara) 시에서 발생한 소요가 급속히 他都市로 확산되었으며, 12월 21일의 친정부 집회에서 성난 군중들이 차우세스쿠에게 유탈

(22) 동아일보, 1989년 10월 24일, p. 4.

을 펴붓는 돌연한 사태가 발생했다. 군중들에 대한 경찰의 발포는 정규군과 반정부 세력들이 보안군과 전투를 벌리는 내전상태를 빚었으며, ‘구국전선’은 임시정부를 구성했다고 선언했다. 12월 25일 도피중이던 차우세스쿠 부부가 체포되어 비밀재판을 받고 즉각 처형되었다. 개혁을 거부하던 차우세스쿠의 처형과 더불어 42년동안 루마니아를 지배해 온 공산당 정권은 종말을 고했다. 12월 28일 루마니아 집권평의회는 국호를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에서 ‘루마니아’로 변경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는 1989년 10월까지 평온을 유지했으나, 11월 3일 전후 최대의 시위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11월 10일 지프코프(T. Zhivkov) 서기장이 르라데노프(P. Mladenov)로 교체되고, 의회는 11월 17일 르라데노프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12월 10~11일간 5만명 규모의 공산당 권력독점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당지도층은 3월 26일에 특별 당 대회를 열기로 약속했고, 대통령은 6월까지 자유총선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Banks, 1990:85). 6월 선거에서는 공산당 내의 개혁파가 1990년 2월 창당한 ‘사회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했다. 한편, 지프코프는 12월 13일 당에서 축출되고 수감되는 신세로 전락했다.

1990년 1월 초까지만 해도, “알바니아 공산당(APL)만은 자본주의 노선과 페레스트로이카 및 부르조아 개량주의 쳐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1월 22일 알리아(Alia) 대통령은 당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의사결정의 분권화와 의회선거에서의 복수후보제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공산당의 권력독점과 중앙계획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구사태를 ‘비극’으로 표현하면서, 동구에서 공산체제가 붕괴한 이유는 지도자들이 사회주의 원칙을 철저히 실천하지 않았고 관료들이 대중과의 유대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Banks, 1990:101). 그러나, 알바니아 공산당도 압력에 밀려 1991년 3월 31일 최초로 다당제 자유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산당은 250석 중 3분지 2를 차지하는 승리를 거두었으나 주요도시에서는 알리아 대통령을 포함한 공산당 고위간부들이 낙선하는 이변을 놓았으며, 선거결과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들이 폭발했다. 이렇듯 알바니아의 공산당 독점지배도 다른 동구국가들과 유사한 몰락의 길을 밟아나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은 소련 및 동구국가들의 급변이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게 어떠한 충격을 가했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북한지도층은 충격을 극소화하면서 급변한 국제환경에 혼명하게 적응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다.

3. 소련과 東歐變革에 對한 北韓反應

소련과 동구국가들은 북한정권이 수립되자마자 承認을 해 주었고, 한국전쟁 기간과 전후의 복구기간중에도 물심양면으로 북한을 지원해 주었던 북한의 주요 盟邦들이었다. 이들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에도 한국의 접근을 許容하지 않았던 북한의 전통적 사회주의 우방이었다. 1984년 5~6월기간 金日成은 소련과 알바니아를 제외한 東歐 7個國을 순방하면서 우호·협력을 다짐했었다.⁽²³⁾

1984년 5월 27~29일간 폴란드를 방문중이던 김일성은 자유노조 사태를 가르켜, “체국주의자들과 국내 반혁명세력의 사회주의 전복활동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진압을 위한 단호한 조치가 폴란드 사회주의 체제를 보호하였다.”고 정부의 강경조치를 옹호하였다.⁽²⁴⁾ 5월 29일에서 6월 3일까지 동독을 방문했을 때, 동독과 북한은 25년동안 유효한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과 ‘1990년까지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발전시킬 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6월 6일의 프라하 군중집회에서 후사크 서기장은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상호병력감축 및 비핵지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북한과 뜻을 같이 한다.”고 연대성을 강조했었다.⁽²⁵⁾ 김일성이 헝가리를 방문했을 때(6, 7~9) 카다르는 북한의 외세의 간섭없는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통일방안에 지지를 보냈었다.

김일성은 6월 9~11일 유고를 방문하여 양국간 친선과 경제협조 및 비동맹운동강화에 관하여 논의하고, 양당이 직면한 중요한 과업은 社會主義와 共產主義 건설을 완성하여 전쟁을 반대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었다.⁽²⁶⁾ 6월 12~17일 기간에는 불가리아를 방문하여 “마르

(23) 金日成의 1984년 소련·동구 순방외교에 관해서는, 全寅永, “北韓과 東歐諸國間의 關係,” 朴在圭(편), 「北韓의 對外政策」(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 293-308 참조.

(24) FBIS, Vol. II, May 30, 1984, p. G5.

(25) FBIS, Vol. II, June 8, 1984, pp. D1-D6.

(26) 朝鮮日報, 1984년 6월 12일, p. 1.

크스-레닌주의와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형제적 친선과 연대성 및 협조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친선과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또한 ‘2000년까지의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를 발전 시킬 데 관한 協定’을 맺었으며, 지프코프 서기장은 군중대회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불가침선언 및 군비축소 등에 관한 북한입장을 지지해 주었다.⁽²⁷⁾ 마지막 순방국인 루마니아를 데번째로 방문한 김일성과 차우세스쿠는 서로 각별한 친근감을 표시했었다.⁽²⁸⁾

김일성의 동구방문은 다음 해인 1985년 5월의 지프코프 평양방문으로 이어졌고, 10월에는 차우세스쿠가 북한을 방문하여 변함없는 우호·협력관계를 다질렀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등장이후 동구국가들이 사회주의권의 단결보다는 국익을 우선시하면서 자본주의식 해결방법을 도입하고 공산당의 지도적 위치를 포기해 나가자, 북한의 동요와 우려는 심화되어 갔다. 특히, 소련과 동구국가들이 대거 1988년의 서울올림픽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은 큰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

동구국가들이 한국과 修交하는 方向으로 움직이면서 북한의 좌절감은 심화되고 반응도 격해졌다. 헝가리가 한국과 1989년 2월 1일에 수교하자, 북한은 2월 2일자 外交部 각서를 통해 “한·헝가리 수교는 헝가리의 분열분자들이 2개조선 음모에 가담한 결과이며, 명색이 사회주의 나라인 헝가리가 제국주의 앞에 투항하고 그들의 반사회주의 戰略에 가담한 것이며, 사회주의 벗들간의 도덕적 견지에서 보나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背信行爲다.”라고 헝가리를 신랄히 비난했다.⁽²⁹⁾ 폴란드가 뒤를 이어 11월 1일에 한국과 수교하자, 11월 3일자 노동신문은 전통적 우호관계에 흠이 가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폴란드가 제국주의자들의 思想·文化的 침투와 그에 합세한 反社會主義 세력들에 의하여 정권이 교체되었으며, 폴란드 당국은 이번에 저지를 행동으로 인하여 쓴 맛을 볼 때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북한의 격렬한 항의와 분노표시는 북한의 충격과 좌절감을 反映하는 것이다.

호네커 서기장이 크렌츠로 교체되었을 때 크렌츠에게 축전을 보내, “제국

(27) 《로동신문》, 1984년 6월 19일, p. 2.

(28) 《로동신문》, 1984년 6월 20일, p. 2.

(29) 《內外通信》(종합판), Vol. 39(1989. 1. 1~6. 30), pp. 105~106.

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을 통해 형제적 친선의 유대로 굳게 연결된 양국사이의 전통적 친선협조 관계가 날을 따라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던 북한은 11월 9일의 베를린 장벽 붕괴라는 엄청난 충격적 사태를 목격해야만 했다.⁽³⁰⁾

베를린 장벽의 붕괴에 이어서 체코슬라바키아에서도 무혈의 벨벳(Velvet) 혁명이 발생하고, 12월에는 북한의 국내정치와 여러모로 유사한 면을 지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이 내전상태를 맞아 급격히 몰락하자, 북한지도층은 아연실색했다. 표면적으로는 12월 26일에 즉각적으로 차우세스쿠 내외의 종말을 보도함과 동시에 일리에스쿠를 의장으로 하는 ‘救國委員會’를 새로운 정부로 인정한다는 외교부 성명까지 발표했고 루마니아 유혈사태를 루마니아 人民들의 내부문제로 간주한다고 밝혔지만, 이러한 반응은 역으로 북한 집권자들의 당혹감과 혼란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은 시위발생후 오직 차우세스쿠의 업적과 사회주의 고수만을 보도하다가, 12월 22일 처음으로 소요사태를 보도하면서 21일의 ‘주민향상 대책’이 루마니아 공산당과 차우세스쿠의 배려라는식으로 본질을 흐려서 보도했었다.⁽³¹⁾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와 김일성의 북한은 개인숭배와 족벌정치, 내핍생활 강요, 정보차단, 사회주의노선 고수, 대외적 독자노선 등에서 공통점이 많았기 때문에, 차우세스쿠에 대한 인민들의 무력투쟁은 북한지도층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루마니아 사태 직후인 1989년 12월 28일에 유고슬라비아와 한국이 수교함으로써, 북한의 좌절감은 더욱 깊어졌다. 유고연방 간부회의가 12월 22일에 수교하기로 결정하자, 북한은 공산주의적 양심과 양국간의 전통적 관계 및 의리를 저버리는 배신행위라고 규탄하고, 조선민족을 영구히 갈라놓기 위한 분열책동에 가담한 유고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읊분을 토로했다.⁽³²⁾ 북한은 유고가 비동맹운동 의장단으로서의 자격과 체면을 잊고 분별없이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서슴치 않을 정도로 남한과의 수교를 신랄히 규탄했다.

그러나, 동구국가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종주국인 소련

(30) 內外通信(종합판), Vol. 40(1989. 7. 1~12. 31), p. 176.

(31) 內外通信(종합판), Vol. 40(1989. 7. 1~12. 31), pp. 208-209.

(32) 로동신문, 1989년 12월 25일자 논평.

의 변화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對蘇行態는 死活的 國益때문에 너무 소원해지거나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늘 신경을 쓰고 신중히 다루어 왔다.⁽³³⁾ 북한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추진에 대해서, 내심으로 불편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表明했다. ‘소·조 우호·협조 조약’ 체결 28주년을 맞아, 노동신문은 소련과의 유대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데 주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련인민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키다란 성과를 달성했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차츰 소련이 對韓修交 움직임을 보이자, 북한은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7월 29일자 노동신문은 소련을 직접 지칭함이 없이, 조선에서 두 개 국가가 존재하는 것처럼 애써 강조하며 남조선과 수교 운운하는 것은 통일을 방해하고 분단을 고착시키려는 행위로 될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 관련 당사국들이 대화에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역행하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유엔가입에 관해서도, 북과 남의 유엔 동시가입이나 어느 한쪽의 단독가입을 부추기는 것은 대화에 찬물을 끼얹고 조선반도에 분열과 대결을 지속시키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경고했다.⁽³⁴⁾ 소련과 북한간의 관계는 1989년 9월초 세바르드나제 소련 외상의 평양방문 이후 현저하게 악화되었다. 소련은 북한의 시비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했다. 9월 19일자 ‘민주조선’은 세바르드나제 외상과 김영남 외교부장 사이에 열렸던 9월 2일의 회담에서, 소련측 한·소국교에 관한 통보가 있었으며 김영남은 이를 비난하는 秘忘錄을 소련측에 전했다고 폭로했다. 그 비망록은 2개 조선의 합법화, 미국과 소련의 분단책임, 남한의 북방정책 지원, 북한 사회주의를 전복하려는 한·미의 공동음모 가담, 조·소동맹의 유명무실화, 남한 인민들의 統一意志 약화 등 북한의 반대이유를 포함하고 있었다.⁽³⁵⁾ 소·북한관계를 살펴 볼 때, 북한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소련을 비난한 일은 일찌기 없었다.

1989년 9월 30일 한·소수교가 현실화하자 북한은 극도로 분노에 찬 대소비난을 퍼부었다. 10월 5일자 노동신문은 논평원 글을 통해서 ‘달러로 팔고

(33) 북한의 대소관계 특징에 관해서는, 全寅永, “北韓의 對蘇政策：持續과 變化，金達中(편), 「소련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서울：法文社, 1987), pp. 255-265 참조.

(34) 內外通信, 제704호(1990. 8. 10), p. 소 1J-2J.

(35) 內外通信, 제710호(1990. 9. 21), pp. A3c-5c.

사는 外交關係'라고 조롱조로 비난하면서, 소련은 미국과 함께 조선을 38선으로 분열시킨 책임이 있는 나라라는 이색적인 비판까지 첨가했다. 그토록 믿고 의지해 왔던 동맹국인 소련이 경제적 이익때문에 남한과 수교를 서두른 데 대한 북한의 좌절과 울분은 이토록 커졌다.

북한은 12월 13~16일간의 노태우 대통령의 소련방문을 사대주의적 분열 행각으로 규정하고, 방문목적은 북한에 자유화 바람을 불어 넣어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으나, 한·소수교가 기정사실화 되자 북한의 대소비난은 점차 완화되어 갔다. 북한도 환경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국제환경이 1989년 이후 급변하고 한국의 地方政策이 성과를 거두자, 북한은 환경변화에 따른 대외정책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였음인지 새로운 대외행태를 보여주기 始作했다.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북경방문을 통한 中·蘇關係의 正常化, 89년 6월의 天安門사태발생, 동구 공산정권들의 도미노 式의 붕괴, 공산당의 권력독점을 규정한 소련헌법 제 6조를 수정한 90년 2월 5~7일의 소련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 결정, 동·서독의 급속한 통일추진 등 주변환경의 급변은 북한의 對南政策과 對美·日政策의 變化 또는 재평가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국의 民主화와 북한의 경제난 등의 남·북한 정세도 南·北對話와 북한의 美·日에 대한 유화적 자세에 영향을 주었다.

IV. 南·北韓間의 和解·協力 摸索

1. 南·北韓의 環境適應

남·북한은 1980년대가 다 끝날때까지도 對決의 시대를 청산하지 못했었다. 1983년의 비극적인 랭군사태와 1987년의 무자비한 대한항공 858기 폭파 사건은 당시 남·북한간의 누적된 불신감과 적대감이 테러행위로 表出된 극단적인 事例들이다. 참고로 랭군사태는 북한이 반대했던 국제의원연맹(IPU)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던 중에 발생했고, KAL기 사건은 남한의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고 서울 올림픽 개최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다.⁽³⁶⁾ 80년대에 발생했던 이 두 테러사건은 남·북한 관계의 특징이 '對決

(36) 핀란드에서 열린 IPU회의에서, 북한측은 한국의 다음 회의 유치를 저지하려다

과 적대적 경쟁'임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나, 현존공산주의(Real Existing Communism)가 소련과 동구에서 몰락하고 미·소가 협력하며 NATO와 바르샤와 조약기구(WTO)간의 군사적對決이 끝난 상황에서, 남북한도 탈냉전과 탈이념의 새로운 세계적 기류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6.29선언 이후의 민주화 추진 및 북방정책의 성과로 자신감을 얻게 된 남한은 유리하게 전개되는 국제정세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북한은 소련과 東歐의 變革으로 인한 초기의 충격에서 벗어나자 국제환경에 적응하면서 체제 및 政權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북한은 대내적으로 思想敎養 강화를 통한 집단단속에 부심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원하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했다. 1990년도의 新年辭에서 金日成은 동구변혁을 '제국주의자들의 反社會主義 策動'으로 비난하면서 사회주의 고수를 강조했고, 당의 강화와 영도적 역할 제고 및 북한식대로 살 것과 주체를 확립할 것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대남정책에서는 대조적으로 공세적인 적극성을 보여 주었다. 金一成은 휴전선의 콩크리트 장벽을 제거하여 자유왕래를 실현하여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전면 개방하는 등 결정적 구국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북과 남의 최고위급이 참가하는 당국과 각 정당수뇌들의 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했다.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당혹감과 위기의식을 나타내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공세적 방어'의 성격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대의원 선거를 6개월이나 앞당긴 4월 22일에 실시했으며, 5월 24일에 열린 제 9기 제 1차 회의에서 행한 시정연설을 통해 김일성은 다시금 사회주의체제 고수 의지표명과 더불어, 남북간의 자유왕래 및 전면 개방 실현과 불가침선언 채택 및 對美平和協定과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했다.⁽³⁷⁾ 또한, 단일의석에 의한 유엔가입과 과감한 군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당시의 북한이 보여준 대외정책 행태를 살펴보면, 북한이 급변한 국제정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불리한 상황을 타개

좌절되자 심한 욕설을 했다고 이종찬 의원은 전했다. KAL(858)기 사건의 진상에 관해서는, 김현희, 「이제 여자가 되고 싶어요」, 제 1부(서울 : 고려원, 1991), pp. 208-287 참조.

(37) 內外通信(종합판), Vol. 41(1990. 1. 1~6. 30), pp. 3-10과 51-52.

하기 위해 고심하였음을 감지할 수 있다. 남한이 유리한 국제환경에 고무되어 적극적으로 남·북한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면, 북한은 체제와 정권유지를 위해서 대남정책에서 적극성을 보일 필요를 느꼈을 것이다. 남한이 6.29 선언 이후 고조된 통일열기와 독일통일에서 얻은 교훈 및 자극 때문에 북한과의對話(對話)를 원했다면, 북한은 인민들의 동요를 방지하고 관심을 통일로 전환시킴으로써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한과의 대화를 필요로 했다고 짐작된다.

어쨌든, 남·북한은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서 온 새롭고 불확실한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맞게 되었으며, 새로운 현실을直視하여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절히 적응하여 나갈 필요성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立場(立場)은 상이했다. 남한은 동독이 붕괴되어 가고 서독으로 흡수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놀라움과 부러움을 금치 못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北韓도 머지 않아 붕괴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다. 반면에, 북한은 동독이 어이없이 무너지고 차우세스쿠 부부가 처형되는 것을 보고 크게 동요되었다. 북한의 외교관이었던 고영환 씨에 의하면, 북한사회와 간부들과 지성인들이 사회주의 모델로 생각하던 동독이 서독 마르크의 힘에 끌려 무너지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가 처형된 충격적 사실로 인해大使館(大使館)들 전체가 술렁거렸다고 한다. 그는 1989~1990년 시기가 북한외교관들의士氣(士氣)를 최대한으로 저하시키는 시기였다고 그의 최근 저서에서 밝히고 있다(고영환, 1992:114). 당시 남한에서는 통일열기의 고조와 함께 '한民族共同體統一方案'이 나왔으나, 반면에 북한에서는思想敎養(思想敎養)을 강화하고 東歐(東歐)에 유학중이던 학생들까지 소환하는 등 극히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여 주었다.

남·북한의對內·外 사정은 양측 지도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인對話(對話)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남·북한은 8차례 걸친 예비회담 끝에, 1990년 9월 4~7일 동안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역사적인南北高位級會談(南北高位級會談)을 여는 데 합의했다.

2. 南·北高位級會談의 성사와 定例化

총리회담의 개막은對決時代의 종식을 위한 희망에 찬巨步였다. 기념비적인 제1차 회담에, 남측에서는 姜英勲총리, 洪性澈 통일원장관, 鄭鎬根

합참의장, 金宗輝 의교안보담당 보좌관, 李鎮高 경제기획원 차관 등 7명의 대표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한편 북한측에서는 延亨默 정무원 총리를 위시하여, 金光鎮 인민무력부 부부장, 安炳洙 조국평화통일 위원회(祖平統) 서기국장, 白南俊 정무원 참사실 실장, 김경우 대외경제사업부 부부장 등 7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판문점을 넘어 온 북한측 인원수는 대표단 7명외에도 수행원 33명과 기자단 50명을 포함한 총 90명이었다.⁽³⁸⁾

남·북한의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이 회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은 지대하였으나, 구체적인 合意導出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基調演說과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인식과 입장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의 회담에 도움을 주었다. 제 1차 회담은 분단 45년만에 남·북한 총리가 대좌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었으며, 제 2차 회담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도 중요한 성과였다. 물론, 남·북한이 기본관계, 군비통제, 교류협력 등을 마주앉아 폭넓게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국제기류가 화해·협력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 2 차 남북고위급 회담은 다음달인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평양에서 열렸으며, 남측에서는 姜英勲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 7명과 수행원 33명, 기자단 50명 등 총 90명이 북한을 방문하였다. 회담에서 북한측은 ‘불가침 선언’ 초안 채택을 강력히 주장했고, 남한측은 남북간의 화해, 通行, 通信 및 經濟交流協力を 강력히 제안했다. 결국, 북한의 집요한 ‘불가침 선언’ 채택요구와 남측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 및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채택은 해결을 못 본채 제 3 차 회담에서 다루기로 미루어진다. 제 3 차 회담 일정은 잠정적으로 12월 11일부터 14일 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³⁹⁾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1990년 12월 12일에 열린 제 1 일 회의에서, 강영훈 총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基本合意書’를 먼저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交流協力分科委員會와 政治軍事分科委員會를 설치하여 不可侵에 관한 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맞서, 연령목 총리는 남한측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선언(초안)’과 북한측의 ‘북남

(38)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51호(1990. 12), pp. 38-40.

(39) 同, pp. 93-151 참조.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초안)*을 하나의 文件으로 채택하자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제 2일 회의에서도 북한측은 ‘불가침과 화해협력에 관한 선언’의 채택을 제강조, 남한측도 ‘기본합의서’ 우선원칙을 재천명했다.⁽⁴⁰⁾

양측의 제안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으나, 자기네가 원하는 것만 달성하고 상대방이 중시하는 것을 나중에 무시하거나 死文化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때문에, 제 3차회담도 결국 협상에 실패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끝났다. 그렇지만, 쟁방이 입장과 견해차를 줄이기 위한 절충노력을 기울였고 보다 성숙된 협상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회담이였다.

제 4 차회담은 1991년 2월 25일부터 평양에서 열리기도 되어 있었으나, 북한측은 2월 18일자 평양방송을 통해 걸프전쟁과 관련한 남한측의 경계태세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비난하면서 제 4 차 회담을 예정대로 열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북한은 책임을 남한측에 전가하면서, 사태를 관망하고 평가할 여유를 갖고자 했던 것 같다.

북한은 회담의 완전단절을 원치는 않알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근거는 제41회 세계탁구 선구권대회에 참가할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탁구단일팀 실무위원회 제 1차 회의가 2월 21일 판문점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데에서도 발견된다. 선수 22명을 포함하여 남북한 각각 28명씩으로 구성된 총 56명의 단일탁구팀은 각기 서울과 평양을 출발하여 3월 25일에 일본현지에서 합류하여 한달간의 훈련에 들어갔다.⁽⁴¹⁾ 북한은 탁구뿐만 아니라 제 6회 세계청소년축구 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 파견을 위한 실무위원회 회의에도 응했다. 1991년 2월 22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 대표단은 선수선발 및 훈련, 선수단 구성과 관리, 평가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월 26일 ‘통일각’에서 재개된 제 2차 축구실무회의에서는 5월 4일(서울)과 8일(평양)의 평가전, 남북 각각 70명씩의 왕래 인원수, 5월 8일까지의 선수선발, TV실황중계, 강화훈련을 위한 참가인원(각각 36명)과 일정, 총 62명(남북한 각각 31명)의 선수단 구성, 참가신청서 제출, 결단식과 해단식, 囘服과 장비, 출발 및 귀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

(40) 南北對話, 제52호(1991. 4), pp. 15-62 참조.

(41) 同, pp. 121-127.

했다. ⁽⁴²⁾

남북고위급회담 북측대변인 안병수는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팀스피리트 훈련과 유엔동시가입노력을 비난함과 동시에, 민족통일 정치협상회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와 ‘범민련’ 남측본부의 결성허용을 요구함으로써, 남북고위급회담 재개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6월 26일 북한은 노태우 대통령이 독일통일 과정에 관해 연구하여 통일준비에 만전을 기하라는 6월 16자 지시를 가리켜 남한의 흡수통일 기도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91년 5월 28자 外交部 성명을 통하여, 유엔무대에서 전 조선민족의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이 편견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타개하기 위해 UN加入을決定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실로 중대한 외교정책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統一院, 1991:208). 이러한 대남정책의 극적인 배경으로는 결프전에서의 미국의 승리와 소련의 협조, 4월 19~20일 간 고르바초프의 제주방문, 중국의 유엔가입문제에 대한 중도적 입장 등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튼, 북한이 환경변화를 인정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었으며, 남북관계의 청신호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북한내에서 온건주의자들 또는 실용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을反映하는 것이기도 했다.

7월 11일에 연형묵 총리가 전화통지문을 통해, 전제조건 없이,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제 4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여 옴으로써 남북관계는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8월 20일의 책임연락관 회의에서 북한은 남쪽에서 발생한 콜레라를 이유로 회담장소를 판문점으로 변경하자고 요구했다. 물론, 실제 이유는 8월 19일에 소련에서 발생한 쿠데타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함이었다. 북한의 기대에 어긋나게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북측은 제 4 차 회담을 10월 22~25일까지 평양에서 하자고 다시금 제의해야 했다.

1991년 10월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재개된 제 4 차 고위급회담에서 연형묵 총리는 세차례 회담에서 진전이 없었던 이유는 대결의식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에, 평화를 위한 전환적 대책으로 비핵지대화 문제가 급선무라면서 ‘조선반도의 非核地帶化에 관한 宣言(초안)’ 9개 조항을 긴급제안으로 내놓았다. 또한, 북한은 쌍방 제안중 공통점이나 유사성이 있는 것을 ‘불가침

⁽⁴²⁾ 同, pp. 127-133.

선언'과 '화해와 협력·교류에 관한 기본합의서'로 하여 동시 채택·서명할 것을 주장했다.⁽⁴³⁾ 이러한 북한의 협상태도와 유연성은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측의 鄭元植 국무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등으로 共存共榮關係를 이루어 평화통일로 나가기 위해 전기가 마련되었음을 지적한 후, 평화국축을 위한 상호체제존중과 적대정책포기 및 신뢰국축 등을 통한 평화의 제도화를 역설했다. 그는 또한 대남혁명노선 포기와 核開發 중단 및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 수용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남한측도 기존의 3개 합의서를 둘는 포괄적인 單一合意書(前文 및 15개 조항)를 채택하자는 유연성을 과시했다.

10월 24일의 제 2 일 회의에서 한국은 북한이 비핵지대화를 거론하기에 앞서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전면 수용하며, 신뢰구축의 바탕위에서 재래식 전력감축 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자고 맞받아 나갔다. 북한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은 미·북한간에 체결할 문제라면서 회피하고, 신뢰구축보다는 바로 군축실시를 하자고 주장했으며, 핵사찰은 남한의 핵무기가 완전 철수되어야 응하겠다고 나왔다. 회의에서는 북의 '비핵지대화 선언'과 남의 '핵사찰'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다.

제 4 차회담에서 남·북한은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單一文件으로 된 合意書를 채택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명칭을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로 하기로 합의했고,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2월 10~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성과를 거두었다.⁽⁴⁴⁾ 비록 양측의 주장이 맞서 타결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점진적으로 간격을 좁혀나갔다는 점에서 볼 때, 네차례에 걸친 남북고위급회담은 꾸준히 진전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서울과 평양을 9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오가며 회담을 하거나 보도하게 되었으며, 회담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양측이 공

(43) 북한은 남측이 2개의 문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이를 하나의 문건으로 통합하여 채택하자면서 前文과, 남북불가침, 남북화해, 남북 협력·교류, 그리고 수정 및 효력으로 나눈 21개 조항의 타협적인 통합안을 제시하였다. 남북대화, 제53호(1991. 11), pp. 44-46.

(44) 同, p. 101.

감하여 회담을 지속시키고 定例化할 수 있게 된 것도 큰 성과였다.

3. 南·北韓間의 合意書 採擇과 發効

남·북한은 느리지만 구준한 접촉과 타협을 통해 쌍방간의 차이를 좁혀 간 끝에, 1991년 12월 10~13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제 5차 남북고위급회 담에서 드디어 극적인 ‘합의서’ 채택에 도달했다. 제 4차 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네차례나 하면서 합의서 내용조정과 문안정리 작업을 진행시켰던 남북한은 12월 11일의 제 1 일 회의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쟁점들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렸다. 그렇지만, 12월 12일의 둘째 날 회의에서 쌍방은 결충끝에 序文과 25個 條項으로 된 ‘남북사이의 和解와 不可侵 및 交流·協力에 관한 合意書’ 文案을 타결하고, 동시에 ‘공동발표문’에도 합의했다. 북한은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문제에서 일보 양보했다. 남한은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문제에서 서울과 평양대신 판문점을 받아들였고, 분쟁해결을 ‘유엔현장에 따라’ 한다는 요구를 거둬들였다. 또한, 남한측은 불가침 경계선을 정전협정 규정대로 한다는 데서 북한측의 동의를 얻어 냈으며, 군사적 신뢰구축의 구체적 내용과 군축실현 방법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기능에 포괄 명시키로 하는 데 성공했다. 한편, 북한도 언론·출판물의 상호개방 및 교류문제에 있어 ‘상호개방’을 사제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통행·통신·경제교류협력을 위한 3개의 실천기구 설치를 주장한 남측입장을 거부했지만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의 설치에는 동의했다.⁽⁴⁵⁾

남북한의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의지와, 정치 또는 경제적 필요성 및 절충 노력과 인내 덕분으로 인해서 12월 13일 회의에서 합의서를 채택·서명할 수 있었다. 공동발표문은, (1) 남북한이 각각 빠른 시일 안에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기로 했고, (2) 핵문제 협의를 위하여 12월 안에 판문점에서 대표접촉을 갖기로 했으며, (3)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2월 18~21 일까지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⁴⁶⁾ 제 5 차 회담은 핵문제를 未決로 남긴채 합의서에 서명하는 큰 문제점을 남겼지만, 양측이 타결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다루고 어려운 문제를 다음에 해결하려는 유연성을 보여 주기도 했다. 분단 46년 만에 남·북한 총리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45) 남북대화, 제54호(1992. 3), pp. 80-82.

(46) 同, p. 83.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기쁘고 다행스러운 경사가 아닐 수 없다.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는 성과를 거둔 남·북한은 1992년 2월 18~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제 6 차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合意書'와 아울러 '한반도의 非核化에 관한 共同宣言' (1991. 12. 31)을 발효시켰으며, '남북고위급회담 分科委員會 構成·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서명·발효시켰다. 남과 북은 회담에서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 했으며, '정치분과위원회'와 '군사분과위원회' 및 '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3월 9~18일간 판문점에서 열기로 했다. 또한, 쌍방은 2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남북핵통제 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며, 제 7 차 남북고위급회담을 1992년 5월 5~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로써 남겨진 과제는 남북이 합의서 내용을 성실히 실천에 옮기는 것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부속합의서를 마련하는 것 뿐이었다.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서명·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분과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에 따라, 판문점에서는 정치, 군사, 교류·협력의 3개분과 위원회 회의가 총 14회나 열렸다. 이들 분과위원회에서는 부속합의서 문제와 이행기구 합의서 문제를 논의했으나 異見으로 인해 큰 진전은 없었다. 1992년 5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서 열린 제 7 차 고위급회담에서 남한측은 남북기본합의서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구성·운영하기로 되어 있는 '南北連絡事務所' 와 '共同委員會의 구성·운영 합의서'를 서명·발효시키는 데 최대의 역점을 두었다. 북한측도 시한이 명시된 이행기구 구성·운영 합의서를 부속합의서 채택이전에 우선 서명·발효시킬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임으로써, 쌍방간의 妥結이 가능해졌다. 남북한은 또한 '離散家族 老父母 訪問團과 藝術團 交換' 문제 등에서도 합의했다.

제 7 차 고위급회담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이 발효된 이후의 첫번째 회담으로서, (1) 화해분야의 이행기구로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고, (2) 1992년 5월 18일자로 '군사,' '경제교류·협력,' '사회문화 교류·협력' 등 3개 공동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3) 1992년 5월 18일자로 '남북연락사무소'의 설치·운영을 개시하기로 했고, (4) 부속합의서 작성시한을 불가침 분야는 9월 1일, 그리고 교류·협력 분

야는 9월 5일까지로 정했으며, (5) 8.15를 계기로 노부모 100명, 예술인 70명, 기자와 지원인원 70명으로 구성되는 방문단의 동시교환 실시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⁴⁷⁾ 단, 노부모 및 예술인 방문단의 교환실시가 合意대로 8월에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부속합의서’ 타결을 위한 제 8 차 회담이 9월 15~1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되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변화들이 발생했었다. 우선, 북한의 부총리 겸 대외경제위원회 위원장인 金達鉉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7월 19~25 일까지 서울과 지방의 10여 군데 산업시찰을 하면서, 崔珏圭 부총리와 정부 대표 및 기업인들과 만나 남북경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논의했다.⁽⁴⁸⁾ 북한의 유력한 경제실무자가 직접 남한의 산업시설들을 참관하고 큰 관심을 보여 주었으며, 노태우 대통령과도 經協問題를 논의하고 갔다는 사실과 남한 측에서도 崔珏圭 부총리 일행이 북한을 방문하여 경제협력을 논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두번째 중대한 변화는 중국이 남한정부와 1992년 8월 24일 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决定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의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국익우선의 實利的인 對韓修交를決定함으로써 북한의 외로운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북한의 여유나 선택폭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반면에 남한의 주변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되었다.

1990년 9월 15~18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 8 차 남북고위급회담은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의 실천을 마무리 짓기 위한 大尾를 장식하는 뜻 깊은 회담이었다. 비록 남북한이 상호 핵사찰의 실시와 이산가족방문과 같은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타결하지 못한 우려와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동안 협의해 온 ‘남북화해 부속합의서’와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 합의하고 아울러 ‘남북화해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양측은 또한 11월 5~26일 기간에 화해공동원(11.5), 군사공동위(11.12), 경제교류협력공동위

(47) 제 7 차 고위급회담 진행경과와 共同發表한 合意文에 관해서는, 統一院, 「北韓動向」, 1992년 5월, pp.72-76.

(48) 한국일보, 1992년 7월 22일, p.5; 7월 23일, p.3; 7월 25일, p.3 참조.

(11.19),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11.26)를 열기로 합의하였으며, 제 9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오는 12월 21~24일까지 서울서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남북한은 화해분야 부속합의서에서는, (1) 상호간 체제를 인정하고, (2) 대내외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3) 서로 비방·중상하지 아니하고, (4) 모든 형태의 파괴·전복행위를 하지 않으며, (5) 현정전상을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6) 국제무대에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불가침 분야의 부속합의서에서는, (1)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 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일체의 무력도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2) 상대방 관할구역에 어떠한 수단·방법으로도 정규 또는 비정규 무력을 침입시키지 않으며, (3) 분쟁의 발생시 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거나 대책을 세우고, (4) 우발적 무력충돌시 즉시 적대행위를 중단시키고 군사적통전화 등으로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5) 지상불가침 경계와 구역은 정전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하고, (6)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적통전화를 개설키로 해다.

남·북한간의 교류협력 부속합의서에는 양측이 (1) 자원의 공동개발과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및 합작투자 등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2)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방식으로 하며, (3) 남북은 물자교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4) 투자보장과 이증과세방지 및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하며, (5) 과학·기술·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 (6)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항로를 개설하며, 우선 인천·부산·포항항과 남포·원산·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하고, (7) 김포와 순안비행장간 항로를 개설하며, (8)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9) 남과 북이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며, (11)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들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실시하고, (11) 민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상대측 지역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⁴⁹⁾

(49) 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합의서」(1992. 9), pp. 14-42와, 1992년 9월 18일자 주요일간지 참조.

이들 부속합의서가 채택·발효되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했고 8차에 걸친 총리급회담이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되었으며 매번 90명의 인원이 판문점을 찾았고, 판문점에서는 수많은 협의가 진행되었다. 쌍방은 2년 동안 협상을 지속시키면서 상이한 입장과 견해를 점진적으로 좁히거나 해소시키면서 드디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기본 합의서’와 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3개 ‘부속합의서’ 및 화해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를 발효시키는 개가를 올리게 되었다.

4. 韓半島 非核化 宣言과 北韓의 核問題

한가지 특기할 사항은 제5차와 제6차회담 사이 기간인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이 ‘韓半島의 非核心에 관한 다음과 같은 共同宣言’을 내놓은 것이다: (1) 남과 북은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 (2)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平和的 目的에만 이용한다; (3) 남과 북은 核再處理施設과 우라늄 농축시설을 保有하지 아니한다; (4) 남과 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국이 인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 (5) 남과 북은 이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南北核統制共同委員會를 구성·운영한다; (6)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本文을 교환한 날부터 發生한다.⁽⁵⁰⁾ 이 비핵화 선언을 위해서 남북한은 91년 12월 26~31일 까지 판문점에서 4회의 대표접촉을 가졌고, 1월 중순에 쌍방 총리가 서명한 공동선언문을 판문점에서 교환한 후에, 1992년 2월 19일 평양의 제6차회담에서 발효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비핵화공동선언의 배경으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잇달은 전술핵무기 철수 결정이 있었다. 한국의 蘆泰愚 대통령도 91년 11월 8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을 통하여, 한국이 정책적으로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치·사용하지 않고, 핵안전협정을 준수하고 핵재처리 및 핵농축 시설을 보유하지 않으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 화학생물무기의 전면적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이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

(50) 統一院, 「北韓動向」, 1992년 12월, p. 95.

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북한이 “핵 안전 협정에 조속히 서명하고 핵개발 기도를 포기하여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여 평화적 시대를 열자”고 북한에 간곡히 촉구했다(統一院, 1992:148-151). 노태우 대통령은 12월 18일에 그동안의 관례인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NCND정책’을 깨고, “이 시각 우리나라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核不在宣言을 했고, 다시금 북한에게 핵개발을 포기하고 사찰에 응하라고 재촉구했다(統一院, 1992:153-156).

- 이런 과정을 거쳐 남북한은 12월 31일에 비핵화공동선언을 했으며, 다음 해인 92년 1월 30일 북한은 빈의 IAEA 본부에서 공개리에 ‘핵 안전 협정’에 서명하였다.⁽⁵¹⁾ 북한은 예상보다 빨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여 지난 6월 말~7월 초순까지 세차례나 사찰관들이 핵시설을 방문한 바 있다. 아는 실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1985년 12월에 핵확산 금지 조약(NPT)에 가입했으면서도 18개월 내에 체결하기로 되어 있는 핵 안전 협정을 만기일로부터 5年 以上이나 초과하도록 지연시켜 왔었다. 이러한 북한이 국제적 壓力과 국내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결국 핵 안전 협정에 서명하고 핵사찰을 받는 긍정적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⁵²⁾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우려했던 만큼의 수준에는 미달되어 있으나,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 현재 공사중인 ‘방사화학실험실’은 규모가 너무 크고 풀루토늄을 소량이나마 추출한 바 있어 미·일·한 등은 공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⁵³⁾ 또한, 북한이 핵물질을 군사시설이나 터널 등지에 은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미·일·한 3국 등 西方은 북한이 남·북한 간의 상호핵사찰을 받아들여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관계개선을 저해하는 가장 큰 장애가 해소되어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수교가 용이해 질 수 있다. 미

(51) 1968년 7월 1일에 서명하고 1970년 3월 5일부터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은 비해서 평화로운 IAEA와 안전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며, 1974년 5월의 인도 핵실험이후 통제를 강화해 왔다. Banks, *op. cit.*, pp. 909-910.

(52) 북한은 1992년 7월 10일 IAEA와 핵 안전 협정에 의거하여 보유핵시설의 시설별 사찰과 보고방식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補助約定을 공식체결했다고 관 IAEA계자가 밝혔다. *한국일보*, 1992-7-12-, p. 2.

(53) 북한의 吳昌林 대사는 핵재처리 시설로 확인된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지난 6월 18일에 밝혔다. *한국일보*, 1992년 6월 19일, p. 1.

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남북 상호핵사찰을 수용하라는 단호한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남한도 상호핵사찰을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美·日과의 수교에 협조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지난 8월 7일에 발표된 일본의 ‘방위백서’는 남북대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남북군사대결구조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체의 안보에 불안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사정거리 1,000km의 미사일 개발을 우려하고, 이 미사일이 개발되면 서부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가므로 북한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⁵⁴⁾ 미국의 부시대통령은 지난 7월 2일에 미육군과 해군이 해외에 배치한 2,400기의 戰術核武器에 대한 철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핵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핵사찰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철수가 미국의 성실성을 보여 주는 증거이며, 이같은 조치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규범을 지키고 국제원자력기구 및 다른 규칙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⁵⁵⁾ 이러한 美·日 등의 압력에 EC 12개 국가들도 합세했으며,⁽⁵⁶⁾ 이어서 서방선진 7개국(G7)지도자들도 상호사찰을 촉구했다.

북한은 영변의 건설이 핵연료주기를 연구하기 위한 재처리 실험실이지 재처리 공장이 아니며, 풀루토늄 생산용이라는 의혹은 IAEA 사찰을 통해 깨끗이 풀릴 것이라고 응수했다. 吳昌林 순회대사는 북한이 이미 IAEA에 모든 것을 개방했고 블릭스(Hans Blix) 사무총장이 모든 시설을 직접 확인한 바 있으며, IAEA가 원한다면 신고하지 않은 어떤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서도 방문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건설중인 것은 어디까지나 실험실이고, 비핵화 선언이 과학적 연구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⁵⁷⁾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8월 31일부터 10일 동안, 북한이 5월에 IAEA에 제출한 최초보고서에 수록된 모든 목록을 대상으로 제3차 임시사찰을 실

(54) 중앙일보, 1992년 8월 7일, p. 4.

(55) 조선일보, 1992년 7월 4일, p. 2; 중앙일보, 7월 3일, p. 1.

(56) 1992년 6월 17~18일간 리스본에서 열린 EC 12개국 정무총국장회의에서, 소속국들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전제조건으로 IAEA핵사찰의 예남북상 호핵사찰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선일보, 1992년 6월 22일, p. 2.

(57) 중앙일보, 1992년 6월 19일, p. 4.

시한 바 있었다. 블릭스 사무총장은 사찰결과에 관한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찰단이 2개의 미신고 핵시설을 방문했으며 그중 1개는 군사목적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상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⁵⁸⁾ 북한이 국제기구의 핵사찰에 응하고 협조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은 어쨌든 고무적이다.

사실, 북한의 남북 핵사찰 거부는 북한에게 큰 부담을 안겨 준다. 소련과 동구가 완전히 변모했고 중국마저 남한과 수교한 상황에서, 북한은 핵문제 때문에 엄청난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가중되는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남한과 화해·협력하고, 美國과 관계를 개선하며, 일본과 修交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야 할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지금까지의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대외행태를 검토·분석해 보면, 결국 북한이 핵문제를 타결하여 체제의 활기를 되찾고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게 되리라는 희망적 생각을 갖게 된다. 엄청난 주변환경의 변화와 경제적 필요성이 북한 지도층으로 하여금 핵사찰문제를 보다 유연하게 다루도록 할 것으로 보이는 데, 그럴 경우에 남·북한 관계는 물론 美·北韓 및 日·北韓關係가 크게 바뀌고 동북아에서도 冷戰이 완전히 종식될 것으로豫想된다. 오는 11월의 미국대통령 선거와 12월의 한국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북한과 남방 3국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수 있을 것으로 展望된다.

V. 結 論

南・北韓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45년 동안 對決과 敵對的 競爭關係를 지속시켜 왔으며, 오랜 남·북한간의 불행하고도 긴장된 對決狀態는 상방의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제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남북의 대결과 경쟁 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不信과 敵對感을 누적시켜 왔으며, 그동안 한반도에 戰雲이 감도는 심각한 危機가 발생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다행히도,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 국제정세가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1989년의 東歐大變革은 전후의 얄타체제를 붕괴시키고 脫冷戰과 脫理念의

(58) 동아일보, 1992년 9월 16일, p. 2.

신국제질서를 형성시키는 분수령이 되었다. 세계는 이제 냉전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和解·協力時代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과 구소련은 이미 協力者가 되어 버렸고, NATO와 WTO간의 대결도 사라져 버렸으며, 동·서독은統一된 국가가 되어 버렸다.

최근 몇년 동안 발생한 놀라운 국제환경의 변화는 남·북한으로 하여금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對話에 나서도록 만들었다. 남북은 상대방이 경계할 상대이면서도 협력해야 하는 同半者라는 사실을 새로이 認識하게 되었다.⁽⁵⁹⁾ 북한은 동구와 소련의 혁명으로부터 받은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남·북한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일면으로 ‘먹고 먹히우는’ 듯 일식 흡수통일을 경계하면서도,⁽⁶⁰⁾ 타일면으로는 남·북한간의 정치·군사적 긴장해소와 경제교류·협력의 필요성 때문에 남북대화에 비교적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응해오고 있다. 남한은 경제발전과 北方政策의 성공에 힘입어 유리하고 여유있는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남·북한이 회담을 2년 동안이나 계속한 끝에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들을 결국 채택하고 발효시킬 수 있었던 것은 양측 모두가 관계개선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실현의지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에는 ‘祖平統’이나 國家保衛部 등의 강경세력이 있고 남한에는 安企部 등의 保守的인 정치세력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국제환경의 급변과 국내 사회구조의 변화 및 경제난 해소 필요성 등이 온전하고 실용주의적인 기술관료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강화시켜 주고 있다. 냉전의 종식과 화해·협력시대의 도래는 자연히 강경파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

현재, 1953년 이후 태어난 ‘전후세대’가 남한 인구 4,367만명 중 70.6%이며, 1945년 이후 출생한 인구는 전체의 80.9%나 된다.⁽⁶¹⁾ 북한의 인구구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생각할 때, 남·북한의 인구구조와 의식구조

(59) 韓一院은 지난 5월 15일 남북한 관계와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일안보교육체계를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보완·발전시킨 새로운 통일교육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는데, 내용은 북한이 우리의 동반자이나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해 온 경계의 대상이라는 2중적 실체로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 1992년 5월 16일, p.2.

(60)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강한 경계심은 제 1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행한 연형묵 총리의 기조연설에도 잘 나타나 있으며, 그 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북한 측은 ‘흡수통일’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61) 조선일보, 1992년 7월 12일, p.4; 서울신문, 7월 10일, p.4; 중앙일보, 7월 11일, p.7.

의 변화 및 그것이 남·북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경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남한에서는 민주화와 더불어 젊은 世代의 統一熱氣가 고조되고 있어, 政治人们들이 젊은 층의 정치성향이나 對北觀을 신중히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젊은 유학생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구소련과 동구국가들에서의 새로운 체험을 통해 남한으로 귀순해 온 사실을 보면, 북한도 젊은 층의 의식구조가 다르거나 보다 행동적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⁶²⁾ 남·북한에서 한국전 미체험 세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은 남·북한 관계가 펠연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음을 예고한다. 남·북한의 젊은 세대가 강도 높은 사상교육을 받아왔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실제로 체험한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는 뿌리깊은 불신감과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작년만 해도 단일 탁구팀과 단일 청소년 축구팀을 구성하여 출전한 남·북한의 젊은이들이 쉽게 어울리고 친해짐을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⁶³⁾

남·북한이 面하고 있는 經濟的 문제 또한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소련과 동구의 붕괴 및 중국의 개혁으로 인해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북한의 1인당 GNP는 1,036달라로 남한의 약 6분지 1 수준이고 경상 GNP는 229억 달라로 남한에 비해 12분지 1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의화부족으로 인한 원자재 구득난과 석탄 채굴량 등의 급격한 감소로 1990년의 -3.17%에 이어 1991년에도 5.2%나マイ너스 성장한 것으로 韓國銀行이 최근 推定했다.⁽⁶⁴⁾ 한편, 한국경제는 배타적인 블럭경제화 추세와 국내의 임금상승 및 과학·기술수준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들 때문에 남·북한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경제적 교류·협력이 증진되면 그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展望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핵사찰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금년

(62) 북한당국이 구소련과 동구국가들에서 유학중이던 사람들의 대부분을 소환한 것을 보아도, 북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행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월간조선 1992년 5월호에 실린 어느 북한청년의 고백을 보아도, 북한청년들의 의식구조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3) 1990년의 北京 아시안게임에서 젊은 남·북한의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렸었고, 1991년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서는 단일팀이 우승을 할 수도 있었으며, 청소년축구대회서는 단일팀이 8강까지 진출했었다.

(64) 국민일보, 1992년 8월 13일, p. 17; 중앙일보, 1992년 8월 13일, p. 7.

1~7월 기간의 남·북한 교역실적은 1억 3,750만 달러로 前年度 같은 기간의 9,261만 달러보다 48.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금년 말까지 2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이래로 금년 7월까지 남측의 반입액은 총 3억 3,829만 달러였으며 반출은 3,939만 달러어치로 남한이 2억 9,887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나, 북한으로부터 반입된 물품은 아연과 농·수산물 및 시멘트 등이 주종을 이루었다.⁽⁶⁵⁾ 남·북한간의 교역은 ‘상호의존 시대’(the Age of Interdependence)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 들일 때, 계속 증가할 것이며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구소련과 교역을 하는데 있어 道德과 戰略的 측면에 많은 신경을 썼었는데, 정부내와 의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적에게 자원과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복합적 상호의존’의 조건과 실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레어드(Roy Laird)와 프랜시스코(Ronald Francisco)는 ‘복합적 상호의존’ 경우에 (1)多數의 ‘접촉과 영향’의 통로가 있으며, 적대적 군사회담이 우호적인 교역회담과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으며, (2) 문제들 간에는 우선 순위가 없으며, (3) 軍事力은 그다지 유익하지 않다는 세가지 특징이 발견된다고 지적한다(Daird and Francisco, 1985:97-98). 이러한 지적은 급변하고 있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거나 대처하여야 하는 남·북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북한이 진정으로 對決을 청산하고 共存共榮을 추구하려 한다면, 과거의 고정적인 思考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에서 현실과 다가오는 未來를 파악·이해하고 대처하는 ‘新思考’가 要望된다.

남·북한 관계개선은 상호불신과 적대감, 남북상호핵사찰, 이산가족 재회, 주한미군철수, 정치·이념적 갈등 등의 복합적 문제들의 작용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어느 쪽도 쉽사리 기본입장이나 고유입장·이익을 포기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동·서독이 통일을 달성한지 2주년이 되건만 남·북한의 통일은 요원하게만 보인다. 따지고 보면, ‘남북기본 합의서’는 1972년의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에 비해 무려 20년이 뒤진다. 한국이 北方政策의 성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西獨은 東方政策을 20년 동안이나 구준히 추진하여 統一의 기초를 충분히 낙은 다음에 유리

(65) 중앙일보, 1992년 8월 10일, p.2.

한 정세변화를 포착하여 통일위업을 이루었다. 남・북한은 이제서야 '기본 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발효시킨 상태이므로, 이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인내 및 노력을 投入하여야 하며, 남북합의서의 채택・발효는 긴 여정의 시작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南北이 심화된 異質化를 극복하고 평화로운 共同體를 이루어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고 어렵다는 것을 먼저 認定하고 용이한 것부터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자세확립이 요구된다. 그리고 남・북한이 평화적 統一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상대방을 제압, 전복, 흡수, 비방, 또는 고립시키려는 구상이나 전략을 포기하여야만 할 것이다. 만일 어느 쪽이든 남북기본합의서를 政治・宣傳목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서명했다면, 統一은 커녕 민족의 화해・협력마저 요원해 지고 말 것이다.

남・북한의 상대방에 대한 각각의 시각과 認知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거울 이미지' (Mirror Image)와 '敵이미지' (Enemy Imzge)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동반자 이미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방적 또는 상호적인 신뢰구축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남・북한은 오랜 적대관계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남북이 동질성을 회복하여 統一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정확히 파악・이해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렵게 서명・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도 이해와 신뢰의 뒷받침이 없이는 '7.4공동성명'과 유사한 장식적 문서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른다.

자타가 공인하듯이,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은 상당히 어려우며, 북한 지도층은 체제와 政權을 維持하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의 현 전략은 수세전략으로서, 북한은 남・북한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북한의 현 지도층은 정치적 위험부담을 극소화하면서 제한적인 범위내에서의 경제개혁이나 대외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 이유는 개혁을 추구하거나 마지 못해 응했던 구소련과 동구국가들이 몰락해 가는 과정을 생생히 목격했

(66) 이에 관해서는 全寅永,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의 理念的 側面—南北韓의 視角 및 認知比較, 國土統一院,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理論的 기초와 政策方向」(서울 : 1990), pp. 97-119 참조.

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1인 장기집권과 父子 세습체제에 따르는 약점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를 시도하거나 許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여유있는 입장의 남측이 주도적으로 접근하고 협력을 유도하지 않을 수 없다. 경제적으로 우세하고 정치적으로도 多元主義를 許容하며 對外的으로도 원만하고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남한이 長期的이고 大乘의 次元에서 남·북한 관계를 긍정적인 方向으로 이끌어야 하며, 雙方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方案들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또한 북한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남한 자체가 민주화를 계속 추진하고 경제발전을 지속시키며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척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매력적인 모습으로 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측이 북한과 1:1로 팽팽히 겨루려 든다면, 이는 남한의 力量을 제대로 活用하지도 못하는 것이며, 화해와 협력시대의 정신과 전략에도 어긋나는 비생산적인 結果를 초래할 뿐이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統一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고 쉽게 失望하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確信과 希望을 가지고 꾸준히 관계증진을 남측이 앞서서 도모한다면, 북한도 차츰 응해 올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大勢로 보아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으로서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상호간에 교류·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것이 북한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차츰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對南經濟協力에 對한 관심증대 및 희망은 북한도 그러한 方向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남·북한간의 관계개선이나 협력증진은 ‘신사고’와 ‘雙方 모두 勝者가 되는 오리엔테이션’(Win-Win Orientation)을 필요로 한다.⁽⁶⁷⁾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우리 민족이 生存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민족간 對決을 하루 속히 끝내고 귀중한 재원과 에너지를 생산적인 데로 전환해 나아가야만 한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남·북한이 서로 대치하고 비방·중상하느라고 주변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해 기회를 잃고 만다면, 결국 남·북한과 한민족만이 패자가 되어 후회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和解·協力時代를 맞은 남·북한은 어떻게 하면 불신감과 적대감을 해소하

(67) 협상의 요체는 승·패가 아니라, 공통점과 공통이익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다. See Henry Calero and Bob Oskam, *Negotiate What You Want*(Wellingborough: Thorsons publishers Ltd., 1988), pp. 214-215.

고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상을 실천으로 옮겨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상대방의 체제와 이념 및 사고방식을 이해하여야 하며, 그 바탕위에서 어떻게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남·북한이 해소하거나 극복할 과제는 결코 용이하거나 간단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남한의 自由民主主義와 북한식 社會主義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로서, 현재 어느 쪽도 양보하려 들지 않는다. 경제적으로 市場經濟體制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혼합한다는 것도 실제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측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절충하는 문제도 충분한 재원의 뒷받침이 없이는 곤란하다. 각각 맺어 온 대외관계를 조정한다는 것도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면, 적대관계를 지속시켜 온 남북한이 군비통제를 적극 실시해 나간다는 것도 긴 시간을 요하는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남·북한은 어렵고 모순관계에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테서부터 문제를 풀어 나아가야 한다. 통일을 위해서는 보다 접근하려는 노력과 인내와 의지가 요구됨을 인식하고, 각각 최선을 다해서 정치·경제·외교적 實力を 배양해 나가야 하겠다. 남한은 민주화와 경제발전 및 복지정책의 확대 등을 통해서 ‘인간의 얼굴을 가진 자본주의’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북한은 통일을 주장하기 전에 북한사회에 ‘인간의 얼굴을 지닌 社會主義’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통일은 실현되기도 어렵거니와, 설사 무리하게 통일된다 하여도 수많은 문제점과 혼란에 봉착하고 말 것이다.

統一은 하나의 긴 過程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북한이 統一을 앞당기고 統一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점진적으로 정치작업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幸運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뿐이다. 독일통일이 갑자기 달성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서독의 오랜 준비와 조용한 노력을 간과하고 있다. 한 민족은 和解·協力時代를 맞아 이제야 출발을 서두르고 있기는 하지만, 늦게나마 지금부터라도 실망하지 않고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統一의 그날은 훨씬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도 歷史의 變化나 進路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준비가 되면 될수록 그만큼 덜 당황하고 보다 넓은 선택의 폭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정치지도자들은 비전

과 현실감각을 지닌채 소극적인 국민들을 선도하고 설득하며 고무시켜야 할 위치에 있고, 국민들은 좋은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지도자들을 화해와 협력 방향으로 밀어주고 성원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고영환

1992 『평양 25』, 서울 : 고려원.

國防部

1990 『國防白書』, 서울 : 정문출판주식회사.

國土統一院

1990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的 기초와 政策方向』, 서울.

1991. 7 『北韓 및 周邊動向日誌』.

1992. 3 『「南北韓 基本合意書」解説』.

金達中(편)

1987 『소련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서울 : 法文社.

大陸研究所 社會調查本部

1990. 6 『6·25 40주년 국민의식조사』.

라종일 외

1990 『페레스트로이 카의 충격과 파장』, 서울 : 예진.

朴在圭(편)

1986 『北韓의 對外政策』, 서울 :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白種天 外

1992 『危機管理論 : 理論과 事例』, 서울 : 인간사랑.

Baik, Bong

1970 Kim Il Sung, Vol. III, Tokyo: Mirasha.

Banks, Arthur S.(ed.)

1990 *Political Handbook of the World 1990*, Binghamton: CSA Publications.

Boulding, Kenneth E.

1959 "National Images and International System," in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Vol. III, No. 2.

Carelo, Henry and Oskam, Bob.

1988 *Negotiate What You Want*, Welling Borough: Thorsons Publishers Ltd.

Daire, Roy D. and Francisco, Ronald A.

1985 "The Interdependence of Agricultural Trade," in Nish Tamgotch, Jr. (ed.),

Sectors of Mutual Benefit in U.S. -Soviet Relations,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Dawisa, Karen
1988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tung, John
1988 "The Neutralization Approach to Korean Reunification," in Michael Haas (ed.), *Korean Reunification: Alternative Pathways*,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Gorbachev, Mikhail S.
1987 *Toward a Better World*, London: Century Hutchinson Ltd.
- Henderson, Gregory
1974 "Korea," in Gregory Henderson, Richard Ned Lebow, and John G. Stoessinger, *Divided Nations in a Divided World*, New York: David McKay Company, Inc.
- Jones, Christopher D.
1981 *Soviet Influence in East Europe: Political Autonomy and the Warsaw Pact*, New York: Praeger Publishers.
- Kihl, Young Whan
1984 *Politics and Policies in Divided Korea: Regimes in Contest*, Boulder: Westview Press.
- Staar, Richard F. (ed.)
1989 *1989 Yearbook on International Communist Affairs*,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 White, Ralph K.
1968 *Nobody Wanted War: Misperceptions in the Vietnam War and Other Wars*, Garden City, N.J.: Doubleday & Company Inc.